

인쇄연합회, 대선공보홍보물 인쇄 지역 분배 건의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선거인쇄물 지방 분배부터”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는 지난 10월 17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제18대 대선후보 법정 홍보인쇄물을 중소기업계의 대표조직인 인쇄연합회에 맡겨 이를 인구비례에 따라 전국 11개 지역조합의 책임 아래 각 지역에서 제작해 그 지역 선관위에 납품토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1월 6일에는 일간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납품 과정 고려하면 지역 분배가 더 효율적

대선공보홍보물 인쇄 지역 분배와 관련해 고수곤 인쇄연합회장은 “인쇄업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시지역 중심지에 2만여 업체가 있다. 종사원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00만여 인쇄가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11개의 지방조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에 생존을 위한 업계의 정당한 요구조차도 번번이 묵살되어 왔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또한 이 문제는 인쇄업계의 현안이면서 대선후보들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약한 경제 민주화 실천의 시작이기도 하다.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이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의 경제 질서다.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

한하는 것도 경제 민주화를 위한 것이다. 인쇄업계도 몇몇 대형 인쇄업체들이 인맥과 자본을 앞세운 덤핑과 싸늘이 영업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수많은 영세 인쇄업체들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 인쇄업체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선거가 있으면 인쇄업계가 특수를 누린다고 하지만 대선에서는 몇몇 대형 인쇄업체가 힘으로 독식을 하기 때문에 중소 인쇄업체와 지방 소재 인쇄 업체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 대선 홍보물은 서울에서 제작하여 제작업체가 각 지역 선관위에 납품하면 지역 선관위가 관할 지역 내 읍, 면, 동 사무소에 보내고, 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발송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납품과정을 고려한다면 각 지역별로 배분하여 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1월 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수곤 연합회장은 “인쇄연합회가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각 후보들에게 보낸지 20여일이 지났는데도, 캠프에서는 아무런 회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건의서를 보낸 후 법정 선거 홍보물, 입찰 공고를 냈다. 민주당의 입찰공고는 우리 중소기업체들의 요구를 피하기 위한 방편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공고 내용에 참가업체에 대한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갖게 한다. 그 중에서도 선정의 원칙과 기준에서 평가결과는 비공개이며, 참가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란 항목과 당연히 명시되어야 할 최저가 입찰인지, 적정가 입찰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최저가 입찰이라면, 이것은 전형적인 반경제민주화의 처사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각 부처와 투자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강제하고 있는 적정가 입찰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런 입찰은 대형 인쇄업체에게 절대 유리한 것으로, 사실상 지방 인쇄업체나 중소기업체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대선 홍보물은 내재하는 성질상 지역에 배분하여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쇄연합회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인쇄시설 현황으로 볼 때, 지방에서 제작해도 제품의 질이나, 납품시한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운반 도중 파손이나 훼손의 위험이 더 적으며,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100만 인쇄인들은 이번 대선홍보물을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맡기거나, 입찰하는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없는 후보로 간주하고 그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진정성이 없는 허구임을 공론화할 것이며, 선거일까지 각 지역 조합원 업체를 중심으로 인쇄인들의 작은 담론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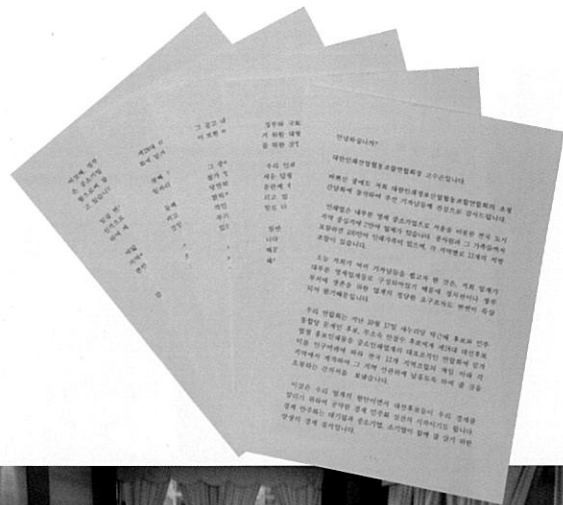
인쇄연합회에 맡겨야 할 8가지 이유

다음은 인쇄연합회가 밝힌 제18대 대선 후보 선거홍보물을 인쇄연합회에 맡겨야 할 이유다.

첫째, 각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선거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셋째, 인쇄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업체수가 2만여 개에 이르고 인쇄업 종사자와 가족까지 포



지난 11월 6일 개최한 일간지 기자간담회

함하면 1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해 도심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넷째,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지역구를 근거로 출마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에 소요되는 인쇄물을 각 지역에서 제작하여 선관위에 납품함으로써 일감이 전국으로 골고루 배분되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대통령 선거는 성격상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선거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제작되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되어야 하지만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대책본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실세에 의하여 특정 업체 맡겨진다.

여섯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인쇄물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입찰에 의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체에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있다.

일곱째, 대통령후보들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번 대선홍보물을 각 지역 조합에 인구 비례로 배분하여 제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우리나라 인쇄시설은 서울과 지방이 평준화되어 지역에 분산 발주하여도 가격, 품질, 납기에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절감효과와 같은 효율성이 뛰어나다.

한편, 일간지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며칠 후 새누리당 대선후보단이 선거인쇄물 작업을 해당 지역으로 이관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가장 먼저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